

자원·환경과 신산업정책

이 논문은 지난 3월 24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원
경제학회 주최의 자원·환경과 신산업정책에 관한 정
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註>

郭相瓊

<고려대학교 교수>

1. 머리말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이라 할 수 있는데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은 量的 수준의 상승도 중요하지만 質的 개선도 병행 되어야 한다. 특히 의식주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도 소득의 여유가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수준에 도달한 국가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중요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우리나라의 경우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경제관계에서도 질적 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1인당 GNP 8천달러에 이르는 경제수준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때마침 새로운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새정부는 새로운 산업정책을 구상하고자 할 것인데 새로운 산업정책에는 자원과 환경이 고려된 새로운 차원의 방향정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자원과 환경이 고려된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을 간략히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고도성장하의 산업정책

(1)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의 개요

1962년 제 1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시행하기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발전하였다. 지난 30년 기간에 GNP는 23억달러에서 3,000억달러를 넘기고 있고, 1인당 GNP도 87달러에서 8,000달러로 육박하여 10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특히 무역규모는 1억7천만달러에서 1,600억달러 가까이까지 신장되어 거의 1,000배의 증가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양적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공업화를 통한 불균형성장, 대외개방형 경제성장전략 그리고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변화(高度化) 등이라 할 수 있다.

(2)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기본방향

경제발전단계를 보면 초기에는 고용흡수, 경제발전을 위한 기반구축, 수입대체,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 등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수입대체, 수출신장, 지속적 성장 등을 위해 내외자를 적극 동원하여 공업화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제조업이 급성장했다. 셋째 단계에서는 제조업 중에서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역점을 두었다. 경제의 질적 향상 보다는 아직도 양적 팽창에 급급한 나머지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새로운 발전전략을 시도해 보는 단계에는 아직 들어서지도 못하고 있다.

(3) 공업화를 위한 산업정책 기초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업화가 고용흡수, 수출신장, 수입대체, 산업고도화,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지속시켜 선진국이 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래서 제조업신장율이 항상 GNP증가율보다 높아야 하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준은 국제수준을 넘어 일본을 능가하여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갖고 있어 왔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초점은 항상 제조업 활성화와 고도화 그리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었다. 그것도 제조업의 생산증가 수치를 집착하여 환경이나 자원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즉 환경보존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단순히 부담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4) 무역과 산업정책

우리나라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을 견지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제조업제품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초점은 수출신장을 위한 지원과 조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긴 안목의 근본적인 경쟁력강화 정책보다 단기적인 활

성화 정책이 근간을 이루고, 국제환경 문제나 에너지사정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래의 산업정책에 의한 국제경쟁력 강화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

3. 환경보존과 에너지 절약문제의 심각성

(1)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양적 성장에 급급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보전을 무시해 왔다. 그 결과로 환경오염과 에너지이용 불합리성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보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화가 심한 가운데 도시의 대기오염은 위험수준을 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황산가스 일평균 농도가 1년간 3회 이상 환경기준을 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서울의 경우 그 농도가 월간 13회를 넘는다고 하니 어느 정도 위험 수위에 와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대도시와 공업지역에서도 대기오염은 심각하다.

수질오염도 심각하다.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 폐수, 양식장 폐수 등의 배출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하수처리, 수질정화, 오염물질 방지 등에 대한 투자와 시설은 그 수준도 낮고 증가폭도 높지 않다. 이러한 결과로 수질오염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주요 하천의 수질오염은 이미 기준치를 넘어 심각한 상태에 있고 웬만한 지류는 더욱더 심각하다. 선진국의 하수처리 비율은 90% 이상인데,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해 70%의 폐수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흘러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의 경우도 공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하루 폐기물 발생량이 약 2.3kg 인데 이는 선진국의 2배로서 환경오염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산업폐기물 중 유해물질 증가는 연간 23%나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

한 대책은 대단히 미온적이며 아직도 폐기물을 무시한 양적팽창에 급급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양적팽창 일변도정책을 정당화하면서 환경보전에 대한 투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오염실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는다든지 문제를 축소시켜 문제의 심각성을 회피하려는 정부태도가 더 큰 문제다.

(2)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1972년 6월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이 창설되어 환경보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노력에 비해 환경오염이 더 크게 증가하여 지난 6월 브라질 리우에서는 150여개국 이 모여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제협약을 통해 환경을 고려한 교역제한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체결된 국제환경협약이 150여개에 달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무역규제조치를 내포하고 있는 협약만도 18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환경문제가 국제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GATT체제하에서도 환경규제가 무역제한조치로 취급될 수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특히 엄격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는 선진국은 환경 때문에 생산비가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환경규제를 받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환경상계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가지 이유와 방법을 내세워 선진국은 환경을 무기로 보호주의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앞으로 더욱더 이 보호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이에 대비하여 국내환경기준의 상향조정과 함께 환경을 고려한 무역증진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환경문제가 어느 시점에서 급속도로 부각될 경우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3) 환경보호 정책 개요

우리나라에서 환경보호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첫째 정부(과거 및 현정부)는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양적 경제성장 실적에 역점을 두는 인기관리에 급급하다. 둘째 국민생활과 보다 더 직결된 물가, 시장수급, 농산물, 국제수지, 교통 등 가시적이고 순간적 이해관계에 걸린 문제를 추적하느라 근본적인 환경문제는 도외시한다. 세째 사건사고의 방지에 급급하여 환경문제가 사건화될 때에만 관심을 갖고 그 사건이 일시적인 응급처치로 지나가면 다시 외면한다. 네째 환경에 대한 투자는 장기효과가 크고 단기적 효과가 낮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투자는 비효율적이라 하여 우선순위에서 유보시킨다. 다섯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 여섯째 환경은 국민운동으로 해결하는 것이라는 비상식적 비경제적 사고방식에 오염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정부가 환경보호를 정책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내려놓고 사건화되지 않으면 덮어두려는 성향에 젖어 있다.

(4) 에너지 수급과 환경문제

공업화에 의한 경제성장에는 에너지소비가 수반되는데 특정 에너지원의 소비비중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석유소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석유소비의 증가는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인의 하나가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가격안정, 에너지원 공급확보, 에너지 산업보호 등과 같은 단기적인 무사안일 위주의 정책이었지, 에너지 수급의 합리성과 환경문제를 고려한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것이었다. 그러나 정책의 결과로 환경오염은 심해지고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굳어졌으며, 석유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석유수입의 지역편중화가

심화되었다. 이러한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도 바꾸어야 하지만, 에너지 산업의 개편도 같이 시행되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에너지 수급을 조정하려면 산업구조의 개편도 병행시켜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문제에 따라 에너지원의 이용구조를 조정해야 하므로 환경오염 상태가 에너지수급조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에너지이용에 있어서 에너지 비용만 비용이 아니라 에너지이용에 따른 환경오염도 비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에너지가격 구조도 조정되어야 한다.

(5)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

무사안일한 에너지정책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문제는 해결되는 경향이라기 보다 심화되는 방향이다. 높은 석유 의존도는 에너지공급의 불안정성과 국제수지부담 및 환경오염 등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다. 국제석유시장이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과 동시에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는 심각해지게 된다.

또 하나의 에너지 문제는 에너지의 낭비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양적 팽창에 주력한 우리나라 산업정책의 결과로 에너지 다소비형태의 산업이 계속 확대되어 에너지 소비가 너무나 높다. GDP(국내총생산) 1,000달러 생산에 소비되는 에너지 비율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면 1990년 현재 우리나라는 0.62 TOE(석유기준에너지량)인데 비해 일본이 0.27 TOE, 독일이 0.35 TOE 그리고 프랑스가 0.40 TOE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다소비구조는 환경오염을 더욱더 증폭시키기도 하여 이중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6) 평가와 전망

우리나라의 1인당 GNP는 금년에 8천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환경문제와 에너지 시장 사정은 이러한 경제수준에 비해 심각하다. 경제의 질적 개선도 중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양적 팽창만으로 선진국 진입을 시도하고 있으니 허구적인 요소가 많다. 겉으로 보이는 전시형 규모와 수준을 내세우는데 급급하고 국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장기적인 안목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정책적 배려가 미약하다. 행정부도 단기적인 경기활성화에 급급하고 근본 문제에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환경과 에너지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심화된 문제는 더 큰 부담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4. 새로운 산업정책모색

(1) 새로운 여건의 대두

현재 대두되어 있는 새로운 국내외 여건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구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국제환경보존활동이 점점 더 적극화 되고 있다. 이는 지구의 오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냉전시대가 끝나고 국제간 경제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데 따라 심화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압력은 높아지지만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국제환경오염방지운동에 저촉되는 것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은 비교적 환경규제에 의한 영향을 더 받을 것으로 내다 본다. 환경문제를 고려한 무역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입장에 다가서고 있다.

세계 중국의 공업화와 북한의 불안한 정세 등이 한국의 환경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보존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도 앞장서야 한다.

네째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국민생활과 산업

활동이 질적향상을 무시하고 양적팽창에만 급급할 단계는 지났다. 소득수준이 의식주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여가와 문화생활에 소득을 할애하는 가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국민생활과 기업생산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수준에 와 있다.

다섯째 부분적인 일시적 마찰실업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인력난이 심할 만큼 고용수준은 거의 완전 고용상태에 도달해 있으므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다소비생산과 환경오염 기업활동을 그대로 안고 있을 필요는 없다. 3D계통의 산업에 고용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양적 팽창에서 질적 향상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도시화 현상은 심각하다. 경인지역에 인구의 반이 집중되어 있고, 여타 지역에서도 도시화는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도시화에 따른 환경오염과 에너지 수급의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곱째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어 앞으로 더욱더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질 터인데 이러한 추세는 결국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 단기적으로 환경오염을 외면하고 자원을 더욱더 낭비할 가능성은 높다.

여덟째 소득수준이 더욱더 높아짐에 따라 여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에너지소비와 함께 환경오염 행위는 더욱 더 늘어나고 그 정도가 심해질 전망이다.

끝으로 국민의식이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비협조적이 되어가는 경향이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경보존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국민적 여론 수렴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여건변화는 예를 들어 과거 5년간의 변화보다 앞으로 5년간의 변화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즉 환경과 에너지문제는 앞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

위에서 지적한 새로운 여건의 대두는 곧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참고로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환경보호운동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자원과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강구하여 국제적 규제와 압력에 대응해야 한다. 국제환경보호압력은 앞으로 계속 강화될 것이므로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경제의 질적 향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산업정책이 고안되어야 한다. 이는 곧 국민의 욕구가 신산업정책을 유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한 산업이라는 원칙에 따라 건강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강한 만큼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세째 이제는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낭비에 대한 대가(부담)를 치러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더욱 더 심해지면서 부담이 더 클 것이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의 비용/편익 비율에서 비용을 줄이고 편익을 높이는 새로운 산업정책이 강구되어야 경제의 효율도 높이고 국민부담도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네째 인력난과 고임금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산업을 고부가가치, 기술집약생산방식, 국제경쟁력 확보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편하는 구조조정과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은 상호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에 장애가 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오염과 에너지 다소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환경보호와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접근하고 있다

고 본다면 선진국이 취하고 있는 산업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이 환경보전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정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러한 신산업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새로운 산업정책의 기본방향

지속적인 효율적 경제성장과 국민경제의 체질 개선 및 국민생활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이 되어야 하는 기본원칙에서 새로운 환경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신산업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본다.

첫째, 현재 산업구조 조정은 주로 인력난과 고임금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조정에 환경보전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결부시켜 보다 근본적인 산업고도화와 장기발전 기틀을 마련하도록 한다. 산업 구조조정은 궁극적으로 저공해, 저에너지 이용, 지식집약, 기술집약, 자본집약 등이 조화를 이룬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산업고도화와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R&D 투자에 환경보전과 에너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R&D 투자도 포함시킨다. 추가로 포함시킨다 해도 기수개발의 연관효과에 의해 실제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환경오염산업에 대해 그 정도가 심한 업종은 억제하여 궁극적으로는 국외로 이전하거나 수입으로 대체하고 심하지 않은 산업은 기술개발과 공해방지 시설의 확충으로 공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특정 시한을 정하여 공해가 심한 기업은 전업시키고 심하지는 않으나, 공해를 피할 수 없는 산업은 어느 기간까지 특정 기준치를 정하여 목표달성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공해방지산업을 새로운 차원에서 육성 보호하여 국내 경제의 질적 향상과 산업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

을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에 플랜트 수출과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보전에 전문화된 기업에 대한 배려가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 그 정도가 심한 산업에 대해서는 억제와 규제를 강화하고 다소비가 아니라도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개발과 시설개체를 유도하도록 한다. 에너지소비가 과다하여 수입에너지의 사용부담이 제품수입의 부담을 넘거나 비슷한 정도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차라리 수입으로 대체하고 전업을 유도하는 것이 더 유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온실 바나나 재배가 그 예이기도 하였다.

여섯째, 에너지원 가공산업과 에너지 사용기기(자동차 포함)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 설비개체 및 신제품 생산등을 달성하는 시한을 정하여 반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도록 하는 방법의 하나로 에너지가격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수출업체로서 에너지 저소비와 저공해 유발산업에 대해서는 일반 수출업체와 차별하여 육성발전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는 수출구조의 개선이 환경과 관계될 것이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출신장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출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일부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환경오염이 심한 업체를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키거나 규제 및 억제하는 경우 그 산업의 제품 부족분은 수입으로 대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에너지 과소비와 높은 환경오염을 수반해야 하는 제품을 수입하면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생산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공해와 에너지 소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수출실적에 급급하면서 수

입은 나쁜 것으로만 취급하는 종래의 산업정책 방향은 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도금의 경우 도금을 많이 해야 하는 제품을 수출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제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세계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끝으로 환경보전과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차원의 R&D 투자가 대폭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보전과 에너지 효율제고에 대해 규제와 감독 일변도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정부가 문제해결에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정부기구와 새산업정책

지금까지 정부기구에서 환경과 자원을 담당하는 부처가 양적 팽창에만 열을 올리는 부처에 밀려서 정책개발이나 시행에서 열위를 면치 못하였다. 정책개발에 소홀히 하고 목전의 전시효과와 감시감독에 더 노력하였던 해당 부처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환경과 자원문제를 무시하는 경향이 주원인이라고 하겠다. 특히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에 흡수시켜 버리고 환경처 장관을 비전문인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처사다. 그 많은 부서 중에서 동자부만을 없애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히려 없앨 바에는 동자부를 환경처와 합치는 것이 조금이라도 합리성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환경처는 환경보호가 단순한 단속과 규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문제로서 정책개발과 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경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연구로 제구실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처의 구성인원이 대부분 법계통이고 환경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책개발에는 소홀하면서 고발과 규제에만 열을

올린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환경과 자원문제를 고려한 신산업정책이 강구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의 효율적인 인사조치와 새로운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5) 새산업 정책과 국민경제의 장래

경제발전의 궁극적 목적은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이라고 지적하였다. 공해와 생계비 부담을 높이면서 경제성장을 하면 국민생활 수준은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공해속에서 소득만 높아지면 우선은 기분이 좋아지겠지만, 실제로는 허구일 것이다. 이제는 겉으로 나타나는 전시효과보다 속으로 알찬 생활의 질이 향상되는 경제발전이 추구되어야 지속적인 복지후생이 증진될 수 있다.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신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 맺는말

모든 국민은 좋은 환경에서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가장 중요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정부이다. 환경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는 극히 부족하다. 정부가 이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전과 자원활용 문제는 시장가격 기능에만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민이 공동부담을 갖게 하는 정책과 제라 할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는 국내 경제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내실있는 생활, 지속적 성장, 국제조류에 부합하는 대책, 유비무환, 미래에 대한 설계로서 환경보전과 에너지이용 효율을 고려한 신산업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